

엘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1991. 6. 26

姜元植(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本 資料는 統一政策 立案의 參考資料로 作成한 것으로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

目 次

1. 現 況	3
2. 評價와 展望	4
가. 고르바초프의 政治的 立地 약화	4
나. 聯邦政府의 代表權 지속	5
다. 고르바초프·엘진 協力 持續	6
라. 新聯邦條約에 입각한 蘇聯邦 再編 加速	8
마. 市場經濟로의 移行 加速	10
3. 韓國의 考慮事項	12
가. 러시아 共和國과의 實質的 友好關係 구축	12
나. 聯邦·共和國 關係를 고려한 對蘇 政策 추진	13
〈附錄〉 國內情勢 安定化와 危機打開 措置에 관한 共同聲明 全文(1991. 4. 23, 「1+9會談」)	14

빈 면

1. 現 況

- 가. 1991. 6. 12 실시된 러시아共和國 大統領選舉에서 옐친은 60% 이상을 득표, 러시아공화국 최초의 民選大統領으로 선출됨.
- 이번 選舉에서 경합한 大統領 候補는 옐친 러시아공화국 최고 회의 의장(개혁파), 리쉬코프 前연방수상(보수파), 바카친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중도파) 등 6명이었음. 한편 옐친의 런닝메이트는 공산당내에서 「民主主義를 위한 共產主義者그룹」을 이끌어 온 아프가니스탄 전쟁영웅 루츠코이 大領이였음.
 - 러시아 大統領制는 이른바 「옐친의 옐친에 의한 옐친을 위한 권력」이라고 말해지고 있듯이 대통령제의 도입에서부터 권력 규정, 투표일 확정까지 모든 것을 옐친이 주재하였는 바, 러시아共和國 大統領職은 옐친을 위해 준비된 職責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옐친의 當選은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할 수 있음.
- 나. 옐친은 6. 18~21간 美國 訪問을 통하여, 고르바초프와의 協力 關係를 강조하면서도, 6. 19 ①발트3국의 독립 지지, ②러시아 공화국의 연방군사비 분담금 50% 삭감, ③쿠바에 대한 소련의 원조 반대 등 고르바초프에 정면 대치하는 獨自政策을 천명함.
- 다. 한편 옐친은 7. 10 대통령 취임후, 러시아공화국 내에서의 共產黨 活動을 대폭 규제하는 大統領令을 포고할 것으로 알려짐. 이는 공화국 영내의 軍, KGB, 國營企業體에 대한 共產黨의 活動을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러시아공산당의 권력기반을 약화 또는 와해시키고,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임.

2. 評價와 展望

가. 고르바초프의 政治的 立地 약화

- (1) 소연방 전체인구의 반, 면적의 4분의 3, 자원의 8할을 점하는 러시아공화국에서 엘친의 대통령 당선은 연방대통령인 고르바초프와의 「二重權力」 狀態를 야기함.
- 연방과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의 權限은 ① 법률 발의, ② 법률 서명, 공포, ③ 수상 지명, ④ 각료의 임면, ⑤ 정부활동 지도, ⑥ 외교대표의 임면과 외국대표의 신임장 수리, ⑦ 안전보장회의 주재, ⑧ 임시인민대의원대회, 최고회의 소집, ⑨ 대통령령 공포, ⑩ 비상사태 선언 등으로 중복되며, 부통령 설치에서부터 후보자 연령 제한(65세)과 3선금지 규정도 동일함.
 - 이에 따라 領內 非常事態 宣言 발동에서 大統領令 포고까지 많은 점에서 권한이 중복되어, 兩大統領이 충돌, 새로운 「法律論爭」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 이에 따라 고르바초프의 政治的 立地는 상대적으로 약화됨.
- 고르바초프 연방대통령은 출마후보 1인의 신임투표였던 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間接選舉(90. 3)에서 59%의 지지 밖에 얻지 못했으나, 엘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은 18세 이상의 유권자에 의해 直接選舉로 선출되었음.
 - 고르바초프와 9개 공화국 지도자들이 회동한 「1+9회담」에서 新聯邦條約案이 합의됨에 따라 연방대통령 직선이 내년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바(統一情勢分析 91-02 「고르바초프權力의 現況과 展望」 참조), 고르바초프는 大統領 直選에 대비, 국민들의 생활수준에 구체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改革의 可視的 成果(예컨대 서방으로부터의 경제지

원 획득)를 이루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음.

- 이번 러시아공화국 대통령 선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蘇聯國民들은 개혁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고르바초프로서도 改革派와의 協調가 유일한 선택임을 인식함.

나. 聯邦政府의 代表權 지속

- (1) 러시아공화국의 直選大統領 등장에도 불구하고 聯邦大統領의 國際社會에서의 代表權은 지속될 것임.
 - 연방대통령직은 합법적이며, 「1+9회담」으로 新聯邦條約 체결과 新聯邦憲法 제정이 확인된 이상 聯邦體制는 유지될 것이므로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도 聯邦大統領의 權威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 연방대통령과 공화국 대통령의 權限 配分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 아직 불명확하나, 聯邦政府의 國際的 代表權과 構成 共和國의 聯邦財政分擔 義務가 인정되는 기반 위에서만 단일공동체로서의 聯邦國家 存立根據가 있을 것임.
 - 新聯邦條約이 구성공화국을 주권국가로 규정, 권력기관과 행정기관을 독자적으로 구성하고, 外國과 상주대표를 교환하고 국제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옐친 대통령이 소련을 대표할 수는 없음.
- (2) 따라서 고르바초프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고 옐친의 정치적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옐친이 향후 蘇聯政治의 主導權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음.
- (3) 이와 관련, 옐친 訪美時 미국이 보인 반응은 「二重權力」 상황에 대한 西方側의 대응양식을 시사하고 있음.
 - 美國은 옐친의 대통령 당선을 환영하면서, 옐친을 대통령

취임전에 美國에 초청, 6. 20 부시대통령과의 파격적인 회담을 마련함. 이는 미국이 고르바초프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엘찐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엘찐의 당선이 對外關係에서 소련을 대표하는 聯邦大統領의 地位를 대체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協商對象으로서 고르바초프의 입장과 지위를 계속 고려함.

- 즉 美國은 러시아공화국과의 「直接關係」 증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부시 대통령은 특히 “엘찐 대통령은 고르바초프와 매우 긴밀한 접촉을 갖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있음을 밝혔다”고 엘찐과 고르바초프의 협력을 강조하여, 엘찐의 행동에 구속력을 부가하는 외교적 수완을 발휘함.

- (4) 향후 西方側은 소련 최대의 공화국인 러시아공화국과의 직접적인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등 주로 經濟關係 擴大를 모색할 것이나, 연방정부의 대표권을 고려하여 政治·外交的 問題에 있어서는 고르바초프의 立地를 계속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임.

다. 고르바초프·엘찐 協力 持續

- (1) 엘찐은 당선 회견에서 자신의 最優先課題가 급속한 개혁 추진과 공산주의 종식이라고 선언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고르바초프와 「새로운 均衡關係」 아래 협조할 것을 다짐함.
 - 지난 4월 고르바초프가 좌우 양파로부터의 대통령 퇴진 요구와 탄광 파업 등 政治的 危機를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엘찐의 協力 때문이었음.
 - 즉 고르바초프는 4. 23 엘찐 의장 등 9개 공화국대표와 이른바 「1+9회담」을 열고, 공화국의 주권 요구에 크게

양보하는 한편, 당면한 위기타개책과 정권 유지에 대한 협력을 획득한 共同聲明을 채택함 (共同聲明 全文은 附錄 참조).

- 이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던 탄광파업을 엘진이 노동자를 설득, 파업을 수습하였음.
- 또한 엘진도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등 改革構想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고르바초프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

○ 한편 고르바초프와 엘진에 대한 共產黨內 強硬保守派의 攻勢가 엘진의 당선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어, 고르바초프와 엘진은 공히 協力關係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

- 즉 파블로프 연방수상은 6. 17 연방대통령이나 인민대의 원대회의 승인없이도 首相이 法令을 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內閣의 경제운영권 강화에 관한 非常大權을 요구, 일종의 헌법적 쿠데타를 도모함. 이와 함께 保守強硬派는 서방의 對蘇 經協 유도를 위한 급진적 경제개혁에 반대하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주장함. 한편 急進改革派는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소련지도부 내의 路線葛藤이 재연됨.

- 고르바초프는 6. 21 연방최고회의 연설에서 經濟改革의 延期는 「죽음과 같은 것」이라고 보수파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파블로프의 非常大權 요구를 거부함. 이에 대해 代議員들이 고르바초프의 주장에 동의, 파블로프는 비상대권 요구를 철회함.

(2) 한편 최근 蘇聯共產黨이 분열 또는 와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蘇聯政治의 民主化가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함.

- 최근 야코블레프 대통령고문, 세바르드나제 前외무장관, 바카친 안전보장회의 위원 등을 위시한 蘇聯共產黨內 民主派들이 黨外 민주세력과 同盟을 맺거나 新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추종하는 세력은 공산당내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또한 고르바초프의 보좌관인 샤흐나자로프도 “소련공산당은 의회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정당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共產黨의 黨名 變更을 주장하고 있음.
- 이는 페레스트로이카 추진 이래 진전되고 있는 政治와 社會의 多元化에 기인하는 동시에, 현재의 공산당 조직으로는 더 이상 權力維持는 물론 합리적 정책결정에 의한 國家發展을 도모하기도 어렵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서 共產黨의 대대적인 개편 내지는 분열 등 變化가 임박하였음을 시사함.
- 이와 같은 共產黨의 성격 변화는 蘇聯政治의 民主化를 촉진시킬 것임. 한편 공산당이 현재의 변화추세에 순응하지 못할 경우, 少數政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물론 이에 대한 共產黨內 保守強硬勢力의 반발이 격화될 것이고 이것이 蘇聯政治의 安定을 위협하는 不安要因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나, 현재의 多元化·民主化 추세에 비추어 強硬保守勢力의 반발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新聯邦條約에 입각한 蘇聯邦 再編 加速

- (1) 4. 23부터 시작된 「1+9회담」은 그후 수차례 개최되어 新聯邦條約을 위한 조정작업을 기본적으로 마무리지음. 이에 따라 6. 18 연방최고회의는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9개 공화국 지도자들이 합의한 新聯邦條約 草案을 해당공화국 인민대의 원대회에 송부함.

- 「1+9회담」은 소련국호를 「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共和國」에서 「소비에트主權共和國聯邦」(USSR : Union of Soviet Sovereign Republics)으로 변경시키기로 합의함.
 - 한편 調稅權과 資源管轄權 등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구성공화국간의 異見이 상존하고 있는 바, 新聯邦條約의 最終文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同問題는 최대의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 (2) 한편 新聯邦條約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6개 공화국의 연방 이탈독립 요구는 계속되고 있는 바, 열린 訪美時의 발트3국 독립 지지 발언 등에 비추어 이들 共和國의 分離主義運動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5. 26 그루지야 대통령 직선에서 독립강경파의 감사흐루지야가 83.94%의 투표율에 86.43%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됨에 따라, 그루지야의 脫蘇 分離獨立要求는 더욱 격화될 것임. 한편 연방분리독립에 반대하는 오세티아인과의 共和國內 民族紛爭은 그루지야至上主義者 감사흐루지야의 당선 이후 더욱 격화되고 있으므로 南오세티야自治州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연방군대와 그루지야인 간의 流血衝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나고르노·카르바흐自治州를 둘러싼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民族紛爭은 현재 연방간류를 희망하는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하는 聯邦政府와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아르메니아간의 「사실상 戰爭狀態」로 발전함.
 - 한편 몰다비아 공화국이 5. 23 국호를 「몰다비아 공화국」으로 바꾸기로 결정함에 따라 新聯邦條約 체결거부 6개 공화국(발트3국,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몰다비아)은 모두 國號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삭제함.

- 이와 관련, 6개 공화국 대표는 몰다비아 공화국 수도 키쉬노프에서 회담(키쉬노프 포럼)을 갖고, 월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 脫蘇獨立을 위한 活動 調整 및 政治的 共同問題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힘.
 - 6. 15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新聯邦條約이 7월초에 체결될 것이라고 밝히고, 조약체결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국들도 「느슨한 國家聯合」 형태인 新聯邦條約의 內容을 보면 조약 체결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언명함.
- (3) 따라서 이들 공화국이 新聯邦條約에 가담하게 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한 蘇聯邦體制의 將來는 아직 불명확한 상황에 있음.
- 그러나 「1+9회담」에서 新聯邦條約 거부 공화국을 연방의 「共同經濟圈」에서 제외할 것임을 경고하고 조약가맹공화국에 대한 最惠國待遇를 강조하고 있어, 독립국가로서의 실질적 자립능력을 결여하고 있는 6개 공화국이 新聯邦條約에 참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한편 人口·面積·經濟力 등 모든 면에서 약소한 6개 공화국이 新聯邦條約에 결국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蘇聯邦 體制 유지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마. 市場經濟로의 移行 加速

- (1) 市場經濟體制로의 急進的 移行을 주장하는 엘친의 러시아공화국 대통령 당선으로 향후 蘇聯의 市場經濟化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이미 6. 2 러시아 공화국은 국영기업 70%를 民營化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고르바초프는 國民生活의 可視的 改善이 조만간 나타나지 않는 한, 자신의 權力基盤은 물론 蘇聯邦의 장래까지도 불

투명하다는 인식 위에 西方과의 經濟協力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고르바초프는 90. 11 CSCE에 참석한 EC頂上들에게 1백억 달러 규모의 經濟支援을 요구한 이래 최근에는 外國人 投資 環境 改善을 위한 制度的 裝置들도 마련함. 한편 IMF에 출석한 소련대표단은 소련이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총 2,500억 달러의 財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이와 함께 7. 15 개최예정인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소련에 대한 1천억 달러 규모의 經濟援助 問題를 협의하자고 촉구하고 있음.
- 그러나 서방선진국들은 蘇聯의 「전면적이고도 근본적인 改革」을 借款 提供의 前提條件으로 주장하며, 고르바초프의 대규모 경제원조 유치전략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한편 발트3국은 서방측에 소련에 대한 경제원조를 거부해줄 것을 촉구함.

(2) 또한 美·日 등 서방국가들이 蘇聯의 市場經濟體制 移行 加速化를 위한 고르바초프에 대한 壓力手段으로 옐친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은 큼.

- 옐친은 고르바초프와의 관계 재정립을 비롯하여 급진개혁정책에 대한 保守派의 抵抗을 견제하기 위해 서방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옐친이 美國과의 「직접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訪美한 것도 이처럼 상호이해가 맞았기 때문임.
- 이번 選舉를 통해 개혁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옐친을 매개로 한 西方의 對蘇 壓力은 가중될 것이며, 고르바초프도 西方의 支援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르바초프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가속화 등 西方

의 要求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함.

- (3) 따라서 고르바초프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市場經濟化 政策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이와 관련, 聯邦最高會議는 5. 29 海外投資 誘引을 위해 외국인 의 國內기업 완전소유, 外國기업의 國유화 방지, 자유로운 과일송금, 國內 外國기업의 수출입 자유화 및 關稅혜택 등을 골자로 한 「經濟改革立法草案」을 원칙적으로 승인함.
- 한편 6. 11 부시 美대통령은 15억 달러 규모의 對蘇 農産物 購買借款을 승인함. 향후 9개월간 3차에 걸쳐 제공될 이 借款은 6월중에 6억 달러, 10월에 5억 달러, 그리고 내년 2월에 4억 달러가 각각 인도될 예정임.

3. 韓國의 考慮事項

가. 러시아 共和國과의 實質的 友好關係 구축

- 러시아공화국은 韓半島와 接境하고 있으며 資源의 寶庫로서 시베리아 개발 등의 開發主體임을 감안하여, 한국은 러시아공화국과의 특히 經濟面에서의 實質關係 構築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北韓은 지난 5. 20 북한·러시아공화국간 貿易 및 經濟協力을 위한 共同委員會를 설치하기로 協定을 체결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韓國은 러시아공화국과의 실질적 우호관계 구축을 위해 葉전 大統領 취임 이후로 예정된 訪韓을 활용하여야 할 것임.
- 특히 러시아공화국 大統領이 蘇聯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葉전 大統領은 北韓을 보다 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인 바, 이는 韓·러시아 실질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임.

나. 聯邦·共和國 關係를 고려한 對蘇 政策 추진

- 韓國은 러시아공화국과의 關係를 우선 經濟協力에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聯邦政府와의 기존 關係는 계속 強化·發展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 韓國의 對蘇 借款 供與對象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對蘇 借款은 러시아공화국과의 쌍무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聯邦政府에 公여되어야 할 것임. 최근 美國의 대소 農산물구매차관도 聯邦政府에 대한 經濟지원 임.
- 韓國은 향후 美·日 등 서방측의 對蘇 對應을 면밀히 검토하여, 對蘇 關係 설정에 있어서 美·日 등과 共同步調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임.

〈附錄〉 國內情勢 安定化와 危機打開 措置에 관한
共同聲明 全文(1991. 4. 23, 「1+9會談」)

우리 社會의 危機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 社會는 사회적 분쟁과 민족분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생산은 저하되고 있다. 생활수준이 저하되어 최저필수품의 확보가 위협받고 있다. 국내의 법질서와 규율이 심대히 파괴되고 있다. 수십년에 걸쳐 누적된 고도로 참여한 문제들, 고통을 수반한 移行期의 어려움, 페레스트로이카 과정에서 범해진 과오가 노정되고 있다.

蘇聯大統領과 聯邦構成共和國—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러시아, 우즈벱, 카자흐, 아제르바이잔, 타직, 키르기즈, 투르크멘—의 最高國家機關 指導者들은 1991. 4. 23 회의에서 국내정세를 심의하고, 협조행동을 조속히 실현시킬 필요를 인식했다.

- (1) 會談 參加者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國內情勢 安定化의 必須條件은 헌법에 기초한 질서를 모든 장소에서 회복하여, 新聯邦條約 및 憲法이 채택될 때까지 금후에도 현행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있다. 연방 및 공화국 권력 기관, 지방소비에트와 집행위원회, 모든 조직과 기업의 근무자, 시민은 이 原則에 입각하여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 (2) 危機打開의 最優先課題는 이미 실시된 全聯邦 國民投票의 結果를 고려하여 主權國家들의 新條約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회담참가자는 다음의 措置가 불가결하다고 인식한다.
 - 新聯邦條約의 기초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상기 공화국 대표단이 합의된 文書에 조인한다.
 - 條約 조인후 6개월 이내 新聯邦憲法을 준비하여, 소연방 인민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다. 主權國家聯邦條約의 규정이 新憲法의 기초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 新憲法 채택후 조약 및 헌법에 규정된 모든 聯邦權力機關의 選

舉를 준비·실시한다.

- 移行期 전체를 통하여 연방 및 공화국 권력기관, 모든 단계의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정상적인 활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 회담에 참가한 연방구성공화국의 최고지도자들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몰다비아, 그루지야, 아르메니아가 聯邦條約에의 합류문제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權利를 인정한다. 한편 주권공화국들이 형성할 單一經濟圈의 틀 속에서 연방조약에 조인한 공화국에 대한 最惠國待遇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민족차별, 민족갈등, 거주장소 여하와 관계없이 蘇聯市民의 權利침해를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모든 일을 사법기관은 단호히 저지하여야 한다.
- (3) 1991년도 경제협정들에서 정해진 연방기관과 공화국의 義務를 확인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豫算 및 豫算外 基金에 관하여 그들의 의무를 무조건적으로 이행할 필요를 확인한다.

이때 첨예화한 사회·경제상황을 고려하여 共同 危機對策의 실시를 전원일치로 지지한다.

기업, 지역, 공화국 간의 경제관리상의 관계가 가일층 강화·발전되고, 이에 대한 소련 내각 및 연방구성공화국정부의 책임 강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전국 국민경제의 상황 안정화를 위해 회담참가자는 기간공업 부문, 소비자 생산기업, 철도수송에 特別作業體制를 도입하는데 찬성한다.

필요가 있다면 공화국 권력기관은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활동을 확보할 보조조치를 강구한다.

회담참가자는 住民에 대한 食糧保障을 최우선과제로 고려한다. 중앙과 공화국 기관들은 農業과 農工團地 企業들에 대하여 예정

된 물적 자원 공급을 수행하기 위해 조정된 활동을 행할 것이다. 금년 4~6월중에 소련내각과 연방구성공화국 정부는 農業 및 農工團地 企業과 그 밖의 國民經濟部門들 간의 等價交換關係의 維持에 관한 決定을 책정하여 채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소매가격 개정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생활수준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회담참가자는 市民 특히 低所得層에 대한 社會的 保護를 위한 일련의 보조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다음의 措置를 포함한다.

- 일상필수품에 대한 5% 販賣稅를 폐지한다. 소련내각과 공화국 정부는 1주일 이내에 그 品目리스트를 정한다.
- 소련내각과 공화국정부는 2주일 이내에 가격 상황을 검토하여, 최대의 사회적 긴장을 야기시키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합의·결정한다.
- 보통교육학교 등 학생식당의 가격인상을 보상하는 조치를 취한다. 또한 철도 및 항공의 신운임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한다.
- 1개월 이내에 所得의 物價連動制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다.

합의한 상기 결정들을 고려하여, 연방 및 공화국 지도자들은 탄광노동자 및 모든 근로자들이 경제적, 정치적 동기에 의한 罷業을 중지하고, 그동안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한다.

(5) 국내의 고도로 첨예한 위기상황에 비추어, 연방과 공화국 지도자들은 시민적 불복종과 파업 교사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 합법적으로 선출된 현존 국가권력기관을 전복시키려는 호소를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도자들은 모든 사회·정치세력들이 民主主義의 발전, 代議制 權力機關의 활동, 글라스노스찌에 의해 주어진 가능성을 이용

하여 法律의 틀 속에서 협력하고 공동행동을 취할 것을 주장한다.

이 때 특히 강조되는 것은 현재와 같이 중차대한 시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야 할 것은 國民의 利益이며, 국가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社會의 民主的 改造를 계속하여 經濟改革을 한층 급진전시키면서, 동시에 주민을 사회적으로 떠받치는 措置를 실시하기 위한 實踐活動인 것이다.

회담 참가자들은 情勢安定化와 危機打開을 위한 이러한 모든 措置는 연방구성공화국의 대폭적인 역할 증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소련대통령 M. 고르바초프,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의장 B. 옐친, 우크라이나 공화국 수상 V. 포킨, 벨로러시아공화국 수상 V. 케비치, 우즈베크공화국 대통령 I. 카리모프, 카자흐공화국 대통령 N. 나자르바예프,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통령 A. 무탈리보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A. 아카예프, 타직 공화국 대통령 K. 마흐카모프, 투르크멘공화국 대통령 S. 니야조프.